

'해외연수비 대납' 송성환 행자위원장 사의

〈전북도의회〉

동유럽 연수 자부담 경비 중 1인당 50만원씩 7명의 몫 350만원 대납... 선관위,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전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면을 통해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

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힘이 든다"면서 "짧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자치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의사를 전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심신이 힘들어 병원

에 입원 중"이라며 "퇴원하는 대로 선관위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경비 350만원 중 100만원을 참가 의원들이 자부담토록 했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100만원 가운데 50만원씩 모두 7명의 몫 350만원을 대신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해당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정운천, 대통령 탄핵 찬성 재확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하야는 국민적 요구"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또 탈당에 대해 "지금 당의 환골탈태가 우선이며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이용호 '최순실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지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소위 '최순실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방지하는 일환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관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안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하여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최순실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천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지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현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회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철저한 방지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성=이원형 기자



늘푸른한국당 전북도당 창당대회 28일 늘푸른한국당 전북도당 창당대회가 전주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우·최병국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창당을 축하하고 있다.

도의회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전주덕진중·만경중·전북체육중·고창여중,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325만 6000원 신청

전북도의회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삭감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등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을 못 읽는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규탄한다"면서 "전북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한 학교의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의 중학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한 중학교는 모두 209곳 가운데 4곳으로 이들 학교는 내년 신입생

교과서 383권의 구입을 위해 325만6,000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해당 학교는 전주덕진중, 만경중, 전북체육중, 고창여중 등이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과서를 구입해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원들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을 두 번이나 의결했고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수차례 1인 시위를 벌였음에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서 "190만 촛불로 드러난 민심을 생각하면 국정화 강행은 그야말로 국민우용이자 국민모독 행위"라고 심토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국정교과서 구입을 신청한 4개 학교의 교과서 구입 및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정교과서 퇴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